

"간병했는데 보험금 못 받았다"...가족간병 청구 거절 이유는 입증 기록

보도자료 입력 업데이트

가족을 직접 돌봤는데도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통된 이유는 간병 사실을 입증할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AI 제작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검증이 빠르게 강화되는 추세다. 손해보험업계 보상 실무자는 "가족간병 청구 건 심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록의 출처와 조작 가능성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플랫폼에서 시스템으로 생성된 기록이 있으면 심사가 빠르게 처리되는 분위기"라면서도 "수기로 기입됐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서류는 추가 검증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카카오톡·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연결된 업체로부터 작성된 간병 기록이다. 심사 과정에서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곧바로 허위청구 의심 건으로 분류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 수령한 보험금은 이자와 함께 전액 환수된다.

실제로 가족을 간병하고도 억울하게 사기 의심을 받는 상황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특히 공식 플랫폼을 통한 간병 서비스는 모든 기록이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보험사 심사에서도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간병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은 가족간병과 일반간병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운영된다. 돌봄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며, 이용자가 사후에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간병 증명서는 앱에서 즉시 발급되며, 현재까지 누적 발급 건수는 약 39만 건(케어네이션 발표 기준)에 달한다.

강동현 기자

#가족간병

#보험금

#가족간병 보험금

#가족간병 청구

#보험금 청구